

‘아시아평화연합’(APU) 상상 프로젝트의 출범, ‘1955년 반동’을 넘어

글 박은홍 성공회대 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전공 교수, 본지 기획위원
ehpark@skhu.ac.kr

성공회대 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 전공(MAINS, 이하 메인즈)은 지난 8월 26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2017년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Asian Peace Union(APU) as a Realistic Utopian Project란 주제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을 진행했다. 이 날 발표자로는 국내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박은홍 메인즈 주임교수, 김희정 메인즈 재학생, 해외에서는 Walden Bello 미

국 뉴욕주립대 교수, Ekapant Pindavanija 태국 마히둔 대학 교수,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이에 앞서 조효제,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와 해외에서 초청된 교수진은 메인즈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시아평화연합’(이하 APU)과 관련된 주제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APU 상상프로젝트’의 출범은 2013년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몇몇 ‘긴급조치 9호’ 수형자들과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금’ 마련 협약을 체결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기에 인권과 함께 가는 평화에 대한 토론이 더욱 의미 있었다.

‘반동’을 넘어, 국가주의에 포획된 평화 개념에 대한 도전

이번 학술회의와 특강을 통해 APU 프로젝트는 유토피아적 성격의 프로젝트이지만 현실 가능한 내재적 힘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상 국제적 수준에서 국가간 연대를 꿈꾸었던 것은 제1차 대전이 끝나고 조직된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이었지만 국가중심주의의 벽을 넘지 못했고, 2차대전이 끝나고 조직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역시 국익우선주의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비동맹운동의 모태가 된 1955년에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도 반식민주의,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한 세계평화와 협력의 추진에 관한 ‘반동 10 원칙’이 선포되었는데, 이때 참여한 국가들 대부분이 반민주,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혔다. 비동맹운동의 지도 그룹에 속하는 중국에서 장기 수감 중이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류사오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역시 1955년 반동정신의 한계를 보여준다.

반면 그동안 시민사회가 국제적으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국가간 연합을 건언해왔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각 국가내 민주적 공화주의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시민사회가 국가중심주의를 압박하는 중요한 철학적 논거가 되었다.

필자의 발표문을 중심으로 APU의 가능성과 미래를 간략히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아시아평화연합(APU),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젝트의 미래

첫 번째로, 동아시아에서는 주권, 개발, 안보 중심의 논의가 여전히 지배적이며 국가 중심주의사고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국가주의를 넘어 보편적 가치로서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 내에는 체제, 역사, 문화, 민족, 국력 등의 차이로 인해 이질성이 존재하지만, 영토분쟁, 테러, 이주노동자, 난민, 환경오염 등의 문제에 봉착하면서 인간안보, 생태계 보존 등과 같은 의제를 공유하는 흐름이 있다.

세 번째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신정부를 탄생시켰을 정도로 동아시아에서 가장 활력 있는 시민사회를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한국은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 교류와 차세대 활동가 양성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은 동아시아, 나아가 아시아 전반에 평화-인권 레짐으로서의 APU를 현실화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극단적 국가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북한을 어떻게 APU 트랙으로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젝트의 성격도 지닌다. **민주누리**



* 2017 한국동남아학회 연례학술대회의 라운드테이블 세션인 ‘Asian Peace Union(APU) as a Realistic Utopian Project’